

신(新)기독교윤리의 파도

- 다문화 현실과 한국교회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변화의 필요성

장성진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온누리선교교회)

I. 들어가며

II. 본론

1. 다문화 정책: 글로벌(global) 경제체제에 나타나는 글로컬(glocal) 현상의 아이러니
2. 사회소멸의 공포에 사로잡힌 한국 내 이주민 유입의 경향
3. '인정'(recognition)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성찰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1.03>

• ABSTRACT •

The Wave of New Christian Ethics; The Need of Christian Ethical
Transition for Multicultural Reality in the Korean Churches

Rev., Chang, Sungjin (Onnuri Mission Church, the PROK)

In April 2024, South Korea became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5% of its population being foreigners, mainly due to the “hyper-aging and ultra-low birth rate” of Korean society, which has led to a decrease in the working population, a decline in local populations, and economic growth slowdown;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makes Koreans consider how to live with foreigners, becoming a ‘matter of survival,’ as unclear directions in Koreans’ lives amid changing social structures may lead to societal collapse. The Korean church now faces the additional mission of forming a faith community it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throughout history, Korean Christianity has maintained its Christian identity and ethical attitude despite many social changes, with ethical steadfastness — whe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 being a major driving force behind its growth. As a multicultural tsunami approaches Korean society, it is proposed that the Korean church adopt the gospel attitude of “welcoming immigrants” based on the philosophy of recognition in the New Testament, which can create Christian ethical resonance in Korean society and lead to “social integration,” differentiating from Western phenomena; this new wave is not a storm of chaos but a surfboard of new ethics that will transform into innovation and revival of Korean Christianity.

Key words: Multiculturalism, Glocalism,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Christian Ethics, Korean Churches, Recognition, Migrants

I. 들어가며

연수구 함박마을 대로변에서 난데없는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2024년 5월 19일 오전 4시경에 일어났다. 과거 외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기억으로 37세의 한국인 남성은 러시아계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지나가던 외국인들을 향해 칼부림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인천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외국인 수가 급증해 전체 주민 1만 2천여 명 가운데 약 8,000명 정도, 즉 60% 이상이 외국인인 지역이다. 2명의 40대 외국인이 다쳤는데 그중의 한 명이 그 지역 교회인 라드닉 교회(양병순 목사)의 카자흐스탄계 이주민 성도였다.¹⁾ 이 한국인이 외국인을 공격한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한국 땅에서 주체적인 국적자인 한국인 젊은 남성이 사회적 소외자로 여겨지는 외국인들을 향해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로도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2019년 12월) 이후 내국인 수가 적은 지방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한국 인구 소멸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과 함께 공교육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역교회의 주일학교의 어린이 수 감소까지 현실화하였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주민의 유입과 정착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에 전에는 한국 사회의 곳곳에 묻혀 살던 이주민들이 국가 및 문화에 따른 이주민 밀집 지역을 형성하게 되고, 이제 정부의 각 지자체는 “사회 통합”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²⁾

1) “외국인에 악감정”... 처음 본 남녀 살해 시도 30대 징역 8년 (손현규, 2024.09.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2114400065> (2025년 1월 3일 접속)

2) 김도원, 변재욱, 「연구보고서」 이민과 지역경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이민정책연구원, 2022년 12월을 참조하라.

한국 내 지역교회들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 시부모들과 함께 한국교회 신앙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다문화 아이들을 교회학교에서 기독교 문화교육을 하는 잔잔한 변화를 경험했으나, 이제는 현장에서부터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한국 지역교회의 윤리와 목회 방식이 목회현장에 적용하기 불가능해졌다.

학계에서도 ‘다문화 윤리’에 대한 연구가 교육계, 철학계, 사회과학계에서 다양하게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이 연구가 선교적 방향이나 기독교 교육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특이하고 마이너(minor)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³⁾ 기하급수적으로 2020년대 들어와서 다문화 연구가 한국 학계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 자체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4년 1월 16일 공개한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50만 7,5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하는 수치로 역대 최대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252만 4,656명)보다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4.86%)을 넘어선다.⁴⁾

다문화 사회에서 새롭게 체질 변화가 필요한 한국 교회들은 우선 기존의 전통적 기독교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 이 논문은 진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객관적 현실의 상

3) 심도희, “유교 덕목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통합윤리 연구,” 『동아인문학』 65(2023), 473-495를 참조하라.

4) 2023년 12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lMkY1Nzg5NjglMkZhcj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l2YmJzQ2xtZXElM0QlMjZyZ3NFbmkZVN0ciUzRCUyNmlzVmlld01pbmU1M0RmYWxzZSUyNnBhZ2U1M0QzJTl2YmJzT3Blbl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RkTjNEJTl2> (2025년 1월 3일 접속)

황인식과 해외 다문화 상황에서의 사회 통합의 노력들을 조사하였다. 이어 외국의 이주민 유입에 대한 다문화 현상 사례 및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의 역사를 통해 미세한 다문화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이후 이러한 다문화 상황에 준비되지 못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인식과 행위에 대한 대안들을 교회와 학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정결 (2020)은 윤리학은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고, 현대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행위는 초과 의무가 아니라 의무의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⁵⁾ 이러한 윤리적 동의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에 만연되어 있었고, 이념으로 이루어진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 통합” 시도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실행해 왔다.

페트릭 사비단(P. Savidan)은 ‘국민국가와 다문화의 현실’ 부분에서 국가 체계 안에서 문화적 타자가 평등을 위해 동화를 목적으로 “함께 살기”의 다른 개념을 주창하기 위해 “다문화주의”를 대부분의 유럽에서 노력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러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사비단은 이 정책의 대중적 논쟁은 개인적, 집단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념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매우 격렬하고 심각한 대립을 초래할 때도 있으나 결국 ‘다문화주의’에 대한 수준 낮은 이해로 인해 민주적 다문화주의가 저평가되어 설명된다고 말한다.⁶⁾

5) 정결, “다문화교육의 배경 이론으로서 윤리학,” 『철학논총』 102(2020), 349-367를 참조하라.

산업혁명 후 민주주의적 체제로 초반 이주민 유입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유럽을 비롯한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등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사회현상들과 그 대책들을 살펴보면서 다문화 현실과 이에 대한 국가정책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들의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면서 아이러니한 삶의 윤리적 갈등을 반추해 보고자 한다.

1. 다문화정책: 글로벌(global) 경제체제에 나타나는 글로컬(glocal) 현상의 아이러니

1) 이주민 분포 상황

2019년 U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72,00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는 50,000,000명이 이주하였던 2010년 대비 4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듯 전 세계 인구 중 약 3.5%가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유럽 지역이고, 북아메리카가 그 뒤를 잇는다. 국가 차원으로 분석해 보면 미국에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며,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와 영국에 그다음으로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국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이 가장 많은 출신국으로는 인도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멕시코, 중국, 러시아, 시리아가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서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시리아 출신 이주민 수가 약 8,000,000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2010년과 2017년 사이에는 난민과 망명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13,000,000명에 달하였다.⁶⁾

6) Patrick Savidan, *Le multiculturalisme*, 이산호·김휘택 옮김 『다문화주의: 국가정책성과 문화정책성의 갈등과 인정의 방식』, (서울: 도서출판 경진, 2012), 14-32.

7) Pew Research Center, *Origins and Destinations of the World's Migrants, 1990-2017*, Feb.28. 2018. <https://www.pewresearch.org/global-migration-and-demography/feature/global-migrant-stocks-map/>(2024년 12월 29일 접속)

2) 이주와 노동력, 그리고 다문화정책

2008년 ILO(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가 새로 발행한 “글로벌 경제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대책 추구 (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에 보면,⁸⁾ 글로벌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이주노동력이 선진국 현지 노동력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는 바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저항하는 현지 노동자들과 충돌을 겪는 상황 속에서 많은 비인권적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정착하여 생존하려는 자들은 쫓아내려는 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지킴으로 정체성을 고취하는 반면, 현지인들은 그들의 터를 지키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고수하기 위해 현지 문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상황 속에서 경제문제를 넘어선 사회 정치 종교 문제로 이 이주 문제가 ‘다문화’라는 이슈로, 확장되게 되었다.

서구 사회는 아직도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서 갈등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활발히 이주민들의 유입에 적극적이었던 국가들의 정책들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동화·통합정책”을 실행하는 독일⁹⁾은 과거 강압적이던 서구 유럽의 식민지 정책과는 달리 결국 2005년 ‘이민 국가’를 선언하고 새로운 이민 법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2차 대전 후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들 1965년부터 적극적 유입해 왔고, 결국 이주 배경의 독일인이 전체 독일인의 20%가 넘자, 이민 국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8) Antonio Martín-Artiles, “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no. 14, (2008), 706-709.

9) 한형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기업연구』 8/1(2023), 269-288.

‘이주 금지 정책’으로 실패한 경험을 가진 정부는 1990년대에 ‘동화·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속적인 이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통합정책을 실행하였다. ‘외국인법 개정’(1997년)을 통해, 적응 교육 통합 교육코스를 개설했을 뿐 아니라, 2005년 ‘신이민법’을 제안하여, 사회 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 인력 유치를 강화하였다. 이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시도하면서 이민자 본인에게는 시민권 및 국적 관계, 노동시장 접근, 정착지원, 사회보장 등을 제공하고, 가족 2세대에게는 언어교육, 학교 교육 접근 보장,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독일어 사용 가능, 독일 문화이해’에 관해 이주민이 습득하고 받아들여질 때만 허용되었다. 여기에서 필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터키계 무슬림들, 유고계 및 이탈리아계 이주민들은 독일어와 독일문화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잘 참여하지 않아 그들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소외계층으로 전락해 버렸다.

“다문화적 영국”(Multicultural Britain)을 표방했던 영국은 이주민 정책으로 국가의 명운이 흔들리기도 했다. 200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유색인종 인구는 460만 정도로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하여, 결국 로이 켄킨스(Roy Jenkins)와 토니 블레어(Tony Blair)는 “영국의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이주민 통합에 관한 관심이 구체화 되었다. 여기서 이주민과 영국 시민의 동등한 평등과 참여,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장 핵심적 요소이고, “영국다움”(Britishness)¹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영국의 도시가 바로 레스터(Leicester)시이다. 이 도시는 인종적 다양성과 관용의 증진을 추구하는 시민 다문화주의(Civic Multiculturalism)의 모델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도시이다.

10) ‘영국다움’이란 새로운 문화적 영향에 의해 변형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평등 등을 포함하는 기존의 영국 가치와 대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그러나 이러한 사회 통합 시도는 많은 장애가 있었다. 영국 사회는 7/7 테러뿐 아니라 유색인종의 증가와 노동당 정책 수정이라는 객관적인 조건들의 변화로 담론 차원의 실제 정책의 차원에서 도전에 직면했으며 결국 2010년 영국 총선거에서 37.8%의 높은 지지율로 보수당을 승리로 이끈 데이비드 윌리엄 도널드 캐머런(David William Donald Cameron, 1966년 10월 9일~)이 이주민 정책에 보수적이었다. 이에 대한 화룡점정은 EU 탈퇴에 대한 “브렉시트(Brexit)”의 국민투표 (2016년 6월 23일)이다. 여기서 유럽연합 탈퇴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주민 증가”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해 “영국 내 이주 근로자 복지혜택 삭감”과 “이주자 자녀 양육 수당 지급 2020년부터 전면 중단”까지 제안했다.¹¹⁾ 결국 투표 결과, “찬성 51.89%대 반대 48.11%”로 2020년 1월 23일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했다.

‘이민자통합을 위한 문화 다원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미국은 뿌리가 다른 다인종, 다문화 속의 미국 국민을 통합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 3억 명 중 외국 태생은 12.5%인 약 3,7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남미 출신이고 그다음으로 아시아 출신이 많다. 아직도 백인의 비율이 70.7%를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현재 비백인의 출산율이 더 높고 이민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이 1년을 미국에서 정착하게 되면 영주권, 이른바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 계속 거주할 경우, 5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¹²⁾

이러한 환경에서 “문화 다원주의”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1950년대에는

11) William Outhwaite, “chapter 5; migration crisis and brexit”, *The Oxford handbook of Migrant Crises*, Oxford University Press, Feb. 13. (2019), 93-106.

12) 1990년대 평균 10만 명이 난민 지위 획득, 9.11 테러 이후에도 연간 5만 명, 2005년 연간 7만 명이 난민 지위 획득

‘용광로(melt pot theory)’라는 개념을 통해,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추구했다면, 1960~1970년대 인권운동으로 인하여 학교 개혁운동이 일어나자, 내용물이 제각각 그 맛을 그대로 보존하는 ‘샐러드볼 이론’(salad bowl theory)로 각 인종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1990년대 ‘다문화주의’로 많은 상처와 갈등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1992년 LA 폭동 사태로 인종 간의 갈등과 이와 관련된 미국사회에 대한 폭발이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자, 미국인들은 그들의 탈인종적 및 상호문화적 정체성과 미국적 삶에 대해 사회적으로 재점검하게 되었다. 국민 대부분이 이주민들인 미국은 다문화정책이 국가적인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개별 문화 권리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문화 중개자(cultural broker) 시스템을 두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사회와 괴리 및 정체성 혼란, 부적응에 대한 실제 삶을 해결해줄 수 없었고, 지속해서 이주 아동들이 성장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슈들에 등장하고 있다.¹³⁾ 그러나 2024년 11월 6일 반이민 정책을 지향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재선으로 이 사회 통합을 이끌려는 다문화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류병균은 이러한 서구 사회들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서구 유럽 사회의 정체성이 쇠락해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2007년 7월 호주를 시작으로 서구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공

13) 한국계 이주민 조승희 사건: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주(州) 남서부 블랙스버그 소재 버지니아공대(버지니아텍)에서 이날 오전 7시15분 교내 남녀 공용 기숙사 건물에 처음 침입, 학생 2명을 살해했고 학교 당국이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약 2시간 뒤 공학부 건물인 노리스홀 강의실에서 다시 총기를 난사, 범인인 조승희는 자살하고, 이 총격으로 인해 32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하는 사상 최악의 교내 총격사건 'Virginia Tech shooting leaves 32 dead' <https://www.history.com/this-day-in-history/massacre-at-virginia-tech-leaves-32-dead>,(2024년 12월 29일 접속)

식적 폐기를 선언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민자들의 문화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민자들과 사회 통합을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 집단을 이루고 살게 마련이다.”¹⁴⁾ 그의 평가는 인간 본능적인 면에 있어서 진실이나, 인간의 윤리적 합의와 당위성은 부정적 다문화 상황에 대한 대안을 긍정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 대한 측면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겠다.

2. 사회소멸의 공포에 사로잡힌 한국 내 이주민 유입의 경향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소멸의 공포에 사로잡혀있다. 한국 사회는 2017년부터 1명당 출산율 0.98명을 기록하고 2019년 3월까지도 계속해서 출생아 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하고, 2019년(2019. 7. 1 ~ 2020. 6. 30)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전망을 통계청이 추계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많은 학자는 급격한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우리 사회는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 인구 감소 등 걸잡을 수 없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예측한다. 임형백 (2022)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문제와 함께 이를 대안으로 이민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거시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미시적인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¹⁵⁾

인간의 삶과 이주의 문제를 단지 과학적 통계 방법으로 제한하고 통제

14) 류병규, “3부: 국가 안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반역이다,” 신만섭외 2명,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 (서울: 도서출판 국민북스, 2023), 228

15) 임형백, “인구감소가 초래한 지방소멸 위기와 이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4/4 (2022), 15-39.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정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손쉽게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해서 실패했고, 또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1) 대한민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 과정

기본적인 다문화정책 실행의 입장은 단일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한 동화주의 정책 방식을 탈피하고자 노력하면서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사회화된 문화 다양성 자체를 다문화 사회의 기본 요소로 인정하고 기존의 질서를 전제로 한 사회질서의 회복 대신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1) 2000년대 이주민 정책의 내용과 결과¹⁶⁾

2008년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2007년의 39억 원보다 47억 원, 즉 1.8%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 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대책’, ‘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 등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등장시키고, 2007년부터 관련법이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각 부서의 다문화정책 노력: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거주 외국인지원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법무부는 2007년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과 다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 토대를 마련,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통일부는 ‘북

16) 이화선,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지위,” 『한국융합인문학』 3/2 (2015), 7-24.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들은 2000년대 갑자기 증가한 이주민 수에 대한 단편적 대안이라고 평가한다. 첫째로, 전체적인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아닌 동화 가능한 계층, 다문화가정(국제 결혼이민자, 국제결혼 가정 아동)이나 귀화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성향의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만이 한국 사회에서 관심 되고 또한 왕성히 일어나고 있다. 둘째, 이는 올바른 다문화 현상보다는 왜곡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여지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인과 내국인을 통합하는 정책 체계에 있어서 '차별배제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중에 동화 모형을 추구하는 형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은 다문화와 사회 통합을 표방하며 한국 사회 정착지원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한국 사람 만들기'의 기조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인에 대한 혈통적 의식으로 이주민을 구분해 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동화정책은 도리어 외국인 혐오감(Xenophobia)을 양산해 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2010년대 이주민 정책 내용과 결과¹⁷⁾

2010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확장하여 ‘성실근로자 재취업제도’를 통해 서독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민자의 숙련수준과 국내 노동시장 상황등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또한 이민자들의 가족동반 이주에 대해 한국사회의 공공사회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이 발생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17) 설동훈,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경제와 사회』 106(2015), 73-114.

다양성과 소비와 노동에 대한 긍정적 파생효과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아주 미묘한 문제가 저변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3) 다문화정책에 있어 이주민의 반응과 이에 따른 갈등 현상

전국 20세 이상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 이주민 문화 향수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2008년 실태조사보다는 문화적인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문화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모국 생활과 비교; 소득 행복도, 스트레스, 살고 싶은 나라” 항목에서 ‘소득’과 ‘행복도’ 항목에서는 한국에서의 삶이 더 긍정적인 수치로(약 10% 이상 차이) 결과가 나왔지만 반면에 ‘스트레스’와 ‘살고 싶은 나라’ 항목에서 절대적인 수치로 모국을 선택하였다.¹⁸⁾ 이유는 아마도 한국 사회 정착하고 동화될 가능성이 많은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 지원만 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한국 사회의 인식 및 포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주 노동자의 경우, 사실상 이주민의 약 52%를 차지하지만, 노동 관련 인권 문제의 보장뿐 문화적 접근이나 사회 수용성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정부 4개 부처가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실효를 거두기보다는 한국어교육, 자녀 교육지원, 전통문화체험, 예절교육, 음식문화 체험, 이주여성 상담 등 부처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가정 및 최근 2만여 명을 넘는 새터민 정착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국제 결혼이주나 새터민에 대해 수용적인 이유는 이들은 어차피 한국 사회에 종속적으로나마 정착, 한국문화에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고 동화되도록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는 사회전반에 있어 ‘필요악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18) 조현성, “2010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0-22.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는 하나 한국의 젊은이들이나 실직자들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소득 일용직이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한국 노동자들보다 이주 노동자의 고용을 선호하여 3D 업종을 회피하는 실업자들의 인식과 함께 한국의 약 330만 실업의 문제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주민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운영, 종교, 경제, 문화 등의 타운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게토화의 현상을 보인다.

서울 지역의 구로, 금천 지역뿐 아니라 안산, 인천, 부산, 광주 등, 농촌, 어촌 등 지역 소멸 지역에 집중된 것이 아닌 도시들에서 민족 문화적(ethnic-cultural) 타운을 형성하며 정치 집단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갈등과 공포가 지자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서는 2024년 5월 22일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간의 상생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 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¹⁹⁾ 그동안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사회 통합 정책 실행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는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즉,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내외국인 간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한 것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안산, 광주 등의 이주민 밀집지역에 기존에는 국한되어 존재하던 것이 대한민국 지역 어느 곳에서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19)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 첫 제정 공포,” 연수구청 보도자료 (2024.05.22.)
https://www.yeonsu.go.kr/main/community/notify/report.asp?page=v&goto-page=1&seq=26383&keyfield=&keyword=&s_date=&e_date=&eminwon=&dept_idx=&head_idx=&se_dept_idx=&category=&head_idx_cateYN=&listCnt=
 (2025년 1월 3일 접속)

2) 교세 감소의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교회와 다문화 종교문화 상황

한겨레의 광노필 기자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전, 2019년 10월 20일에 작성한 기사는 우리의 시선을 끌 수 있다. 통계에 근거한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한국 전체 인구의 46.4%에 해당하는 것은 무종교인이다. 퓨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로 지속적인 동남아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무슬림 인구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지금의 0.2%에서 0.7%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인구 기준으로는 10만에서 34만으로 3.4배 늘어난다. 그래서 2050년에는 다양한 종교의 경쟁 상황 속에서 무신론이 70%대로 증가하고 기독교가 인구의 2%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²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사회복지 분야 및 사회 인권운동에 있어서 보수적 성향이든 진보적 성향이든 한국 사회 안에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진보 성향의 한국교회에서는 민중운동이 1900년대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운동으로 발전시켜 왔고, 많은 이주민 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그들을 지원해 왔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정체화를 보이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다문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우선 보고 기독교 윤리적으로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방안들을 학자들의 제안을 통해 알아보자.

(1) 한국교회의 다문화 상황

1990년대 주변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공산권 국가 등 저개발국가에서 값싼 노동력을 팔러 온 많은 이주노동자가 ‘코리아 드림’(Korean Dream)을 가지고 점차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불법체류 노동자

20) 광노필 기자, “세계 종교 지형이 바뀐다,” 『한겨레』 (2019.10.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686134.html> (2025년 1월 3일 접속)

가 나타났지만, 이를 더 이상 범죄로만 치부하기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경제발전에 있어 값싼 노동력이 결정적 요인인데, 이미 한국은 값싼 노동력을 자체적으로 수급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2년 4월 정부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하며, 생산 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을 한국 내 노동력 부족으로 빚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 불법노동자들에게 ‘자진신고 기간’을 주어 출국할 수 있게 하여 회피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되었다.²¹⁾ 이렇게 이주노동자의 이슈가 표면화되자 점차 노동인권 선교가 이주노동자 선교로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이러한 이주노동자 선교는 기존 노동 선교를 기반으로 생겨났으며 소규모지만 다양한 단체의 활동들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이문식 목사는 회년 선교회를 설립하여 1992년 7월부터 구로공단 지역의 필리핀 노동자 중심으로 영어예배를 개설하여 이주노동자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적 문제들, 즉,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 및 폭력에 관한 노동인권 문제, 산업재해 및 열악한 의료상황에 대한 의료문제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1992년 7월 1일 감리교 지인식 목사는 재한 외국인 선교교회를 설립하여 최초로 다민족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뿐 아니라 조선족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은 1991년 초부터 ‘중국 교포 선교협의회’를 설립하여 전통적인 복음 전도 형식으로 대중 집회, 부흥회, 양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선족 노동자들의 한국교회 정착을 도왔으며, 신림동에 ‘사랑의 집’이라는 쉼터를 운영하여 조선족 노동자들의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성남 외국인

21) 강현아,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수용정책 변화와 관련단체의 대응”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1996.06), 303-304.

재외동포 교회의 김해성 목사, 성공회 성생원교회의 이정호 신부, 갈릴리 교회의 인명진 목사 등도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주노동자 선교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사역하게 된 사례들이다. 이주노동자 선교는 낯이 발 전하여 많은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협의회들이 생겨나서, 1994년 12월 인천 지역 ‘외국인노동자 선교협의회’가 창립하는 등 전국적으로 1995년에는 약 40개의 이주노동자 선교사역 단체가 존재하게 되었다.²²⁾ 그러나 이러한 선교사역은 한국교회 내에서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민중 노동운동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정부의 견제와 감시 속에서 급진적 성향을 소유한다는 시각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 노동자 선교를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 다음 두 가지의 이유에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샘물교회 선교단의 피랍 사건 이후 해외선교에 대한 공포와 함께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부정적 인식과 반기독교를 외치는 네티즌들의 여론이 한국교회에는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이에 한국교회는 다른 종교 및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의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교회 연합체들의 이벤트성 선교활동은 한국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효과적인 복음화에 관한 관심과 기대로부터 시작되었다. 2007년 7월 8일 상암 경기장에서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를 새롭게 민족에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교단장협)를 주축으로 국내 주요 교단이 대부분 참여한 연합행사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주노동자

22) 강명규,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세계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선교햇불, 2007), 46-47.

에 대한 선교의 필요를 한국교계가 공감했다.²³⁾

둘째, 이슬람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유입되어 급속도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한국 교계는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8월 국내에 거주하는 113만 3,874명의 외국인 중 이슬람은 1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이 11만 4,790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숫자다. 2년 만에 특정 종교의 외국인이 3만 5,000명이 유입된 것은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이슬람 노동자들의 증가로 서울중앙성원을 비롯해 부산, 광주, 안양, 안산 성원과 대구, 광주, 포천, 제주, 대전센터 등 모두 13곳에 이슬람 예배처가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예배처마다 많게는 300여 명, 적게는 20여 명씩 모임을 갖는 상황일 뿐 아니라, 각 지역에 크고 작은 기도처들이 3,000여 개가 있다. 2024년 7월 말 추산한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발표 따르면 한국에는 약 31만 명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으며 그중 약 70~80%가 외국인이다. 서울에만 한국 전체 무슬림 인구의 40%가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교 중앙회 측은 향후 10~20곳의 예배처 추가 건립 구상을 갖고 있다.²⁴⁾ 이슬람은 이주한 무슬림들에게 모든 일자리, 숙식, 예배, 교육, 복지까지 제공하고 보살핌과 관리를 철저히 해주며, 한국 사회에서 겪는 고통과 충격을 완화해 주며 주체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 교계는 긴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민감하게 더욱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한국교회는 극심한 변화를 사회 변화와 합

23) 장성진, “혼돈 속에 있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진단”, 『신학사상』 149(2010), 219-220

24) “팩트체크: 한국 내 무슬림 이주자 인구는 얼마나 될까?” 김동문 「뉴스엔조이」 (2024. 10. 13.) <https://www.newsjoy.us/news/articleView.html?idxno=24948> (2025년 1월 3일 접속)

께 겪으면서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라인예배의 중요성, 소그룹 모임의 해체 위기, 교회 조직화의 붕괴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것만이 아닌 사회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던 한국 지역교회들이 일시에 맞는 폭탄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변화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 사회의 이주민 유입 현상을 인식하지 못한 한국교회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변화 또한 준비할 생각이 없었다. 목회 데이터연구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추적조사 목회자 보고서 3차”에서 보더라도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서 교인 수 감소로 인한 교회학교 또는 교회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배경의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조금의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다.²⁵⁾ 김교민(2020)은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치는 의미를 잘 고찰해 봐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때는 사회로부터 매우 높은 공적 신뢰를 받으며 한국교회의 선교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한국교회의 빛나는 역사를 뒤로한 채 최근 한국교회는 (중략) 대사회적 비난과 비판 그리고 교회의 공적 신뢰 상실을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²⁶⁾

3. ‘인정’(recognition)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인정’이 단순한 사람들 사이의 예의가

25)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추적조사 목회자 보고서 3차”: 102-103,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00 (2025년 1월 4일 접속)

26) 김교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과 선교적 성찰 - ‘빅데이터-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과제 분석과 실천적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2/5(2020), 199.

아니라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필요’라고 말한다. 이는 다양한 요소가 충돌하는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 ‘인정’의 요소는 인간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정의 부재는 ‘정체성이 거부된 사람들의 일종의 비가시성 형태를 초래하기에 잘못된 인식’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인정의 병리학적 형태들은 대단한 고통을 초래한다고 그는 보았다. 즉, ‘인정’과 ‘정체성’에 대한 밀접한 관계는 다문화주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²⁷⁾ 즉 개인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더 큰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테일러는 주장한다. 그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가고 존중되는 포용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문화주의와 사회 결속을 위한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 세속주의, 개인 신념 체계’ 사이의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이 공존하는 ‘신앙, 영성, 윤리’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그는 계속 던지고 있다.²⁸⁾ 이런 부분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레딩존스 (Jeanette Rhedding-Jones)의 글에 나오는 사례가 바로 이 경우에 적절하다.

“한 교사가 나에게 ‘기독교, 종교와 인간 윤리’라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과목을 가르친 경험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과목을 포함한 1997년 노르웨이 학교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난 이후 이슬람교 학부모들은 그 법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중략) 새로운 입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부모가 와서 자신의 아이를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수업에 출석해야 한다.”²⁹⁾

27) Amy Gutmann,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이상형, 이광석 역,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서울: 도서출판 하누리, 2020), 47-54

28) Patrick Savidan, 50-51

29) 제네트 레딩존스, “유아교육에서의 비판적 다문화실천”, Stephen May, Christine E Sleeter ed., *Critical Multiculturalism Theory and Praxis*, 부향숙, 김경혜 옮김, 『비판적 다문화주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4), 119.

이런 기독교 윤리적 상황이 한국의 상황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의 현재 상황은 이런 다문화 상황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한국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인구 감소와 이주민 증가에 대한 사회적 현상과 종교적 삶 사이의 괴리 속에서 이런 다문화 위기 상황에 대한 무방비의 기독교 윤리적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러한 다문화 상황에도 교회를 세우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윤리는 세워왔다.

김혜령(2024)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니체는 바울의 이방인 사랑 윤리가 기독교를 내세 종교로 타락시켰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알랭 바디우는 바울이 편협된 이스라엘 민족종교와 로마제국의 통치 권력에 맞서서 기독교를 보편주의 윤리로 승격시켰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지만 그들은 공통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을 “이방인 환대의 복음”으로 확립했다고 평가한다. 30)

이주민의 현상에 대한 이슈를 강원돈(2024)의 저서 『기독교 경제윤리론』의 서론에 나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경제는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사회적 가난을 물리치고 화폐자본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³¹⁾ 여기서 ‘생태계’를 과학적 입장에서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과 연관되는 모든 사회환경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주”의 문제는 단지 경제상 황뿐 아니라 자연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난민이 되기도 하고 정치사회 환경 때문에 내전과 박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전 세계 이주민들이 증

30) 김혜령, “주권 국가의 ‘이주민 환대’의 어려운 가능성에 대한 기독교 정치윤리학적 연구-한국 보수개신교의 ‘적대’와 ‘무관심’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회윤리』, 59(2024), 185-240.

31)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서울: 동연, 2024), 8.

가하고 있다. ‘이주’는 결론적으로 인간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논리로 재단되거나 통제되어 설명할 수 없는 이슈이다. 세계 통화의 흐름, 산업의 변화, 세계무역의 경쟁적 관계 등이 또한 다양한 이유의 이주까지도 발생시키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기존 한국교회의 입장은 선교의 대상이고, 복음화의 대상이며, 세계 선교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보고, 함께 심방을 가고, 함께 목회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자들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교회의 안과 밖이 변화하고 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문화적 상황에서 인정(recognition)하면서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대화하며 한국 사회 안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윤리적 노력이 절실한 시기가 이미 왔다. 즉,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파도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몰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의 변화 답은 초대교회의 모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주민 환대의 복음!”

III. 나가는 말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공존”(共存)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복수의 문화 또는 다수의 다른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도시의 기반 시설과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두텁게 연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 근대사회에서 경험했던 문화적 식민지화와는 전혀 다른 형태와 개념을 가진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으로 작금의 인간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글로벌’(global)과 지역(local)을 동시에 살아가는 장(arena)로 변해 버렸다.³²⁾ 이제 세계는 다문화의 거대

한 파도를 이미 겪고 있고, 생존을 위해 많은 이주민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밀집 지역을 만들며 한 나라에 여러 민족의 문화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24년 4월 대한민국은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되었다. 전체 인구 중 5.07%인 260만 2,669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³²⁾

이렇듯 한국도 전 세계 현상에서 예외는 아니며, 이주민 없이는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 사회 존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다문화 현상은 필연적이다. 한국교회는 과거부터 점차 한 부모가 한국인인 다문화가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이제는 재외 교포(조선족 또는 고려인)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기독교윤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한국교회 현장에서 목회자나 교인들이 신앙공동체를 한국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윤리적 당위성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학문적 노력이 없이는 현장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자기들 신앙의 길에 대한 죄책감과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정’(recognition)의 윤리적 철학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문화권의 이주민들을 환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야말로 세속적 학문이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될 것이다.

32) 장미아, 『다문화와 글로벌리티』, (서울: 양서원, 2023), 12-40.

33) 김소연 기자,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한국’, 매경economy (2024.08.30),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4&no=645944> (2025년 2월 10일 접속)

그러므로 다문화의 파도를 방어하기 위한 방파제를 만들기보다는 신(新) 기독교윤리의 서핑보드(surfboard)를 만들어 파도를 거스르며 즐겁고 다루는 한국교회를 위한 신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서적

-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서울: 동연, 2024.
신만섭 외 2명.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 서울: 도서출판 국민북스, 2023.
장미야. 『다문화와 글로컬리티』. 서울: 양서원, 2023.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세계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선교햇불, 2007.

•번역서

- Gutmann, Amy.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이상형, 이광석 역.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서울: 도서출판 하누리, 2020.
May, Stephen Christine E Sleeter ed., *Critical Muticulturalism Theory and Praxis*. 부향숙, 김경혜 옮김. 『비판적 다문화주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4.
Savidan, Patrick. *Le multiculturalisme*, 이산호 · 김휘택 옮김. 『다문화주의: 국가 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갈등과 인정의 방식』. 서울: 도서출판 경진, 2012.

•논문

- 강현아.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수용정책 변화와 관련단체의 대응.”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1996.06), 303-304.
김교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과 선교적 성찰 ‘빅데이터-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한 과제 분석과 실천적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2/5(2020), 199.
김도원 · 변재욱. 「[연구보고서] 이민과 지역경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이민정책연구원, 2022년 12월
김혜령. “주권 국가의 ‘이주민 환대’의 어려운 가능성에 대한 기독교 정치윤리학적 연구- 한국 보수개신교의 ‘적대’와 ‘무관심’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회윤리』 59(2024), 185-240.
설동훈.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경제와 사회』 106(2015), 73-114.
심도희. “유교 덕목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통합윤리 연구.” 『동아인문학』 65(2023).

- 이화선.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지위.” 『한국융합인문학』 3/2(2015), 7-24.
- 임형백. “인구감소가 초래한 지방소멸 위기와 이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4/4 (2022), 15-39
- 장성진. “혼돈 속에 있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진단.” 『신학사상』 149 (2010), 219-220
- 정결. “다문화교육의 배경 이론으로서 윤리학.” 『철학논총』 102(2020), 349-367.
- 조현성. “2010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0-22.
- 한형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기업연구』 8/1(2023), 269-288.

•영문자료

- Martín-Artiles, Antonio “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no. 14, (2008), 706-709.
- Outhwaite, William “chapter 5; migration crisis and brexit”, *The Oxford handbook of Migrant Crises*, Oxford University Press, Feb. 13. (2019), 93-106.

•기타자료

-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 첫 제정 공포”, 연수구청 보도자료 (2024. 05.22.) https://www.yeonsu.go.kr/main/community/notify/report.asp?page=v&gotopage=1&seq=26383&keyfield=&keyword=&s_date=&e_date=&eminwon=&dept_idx=&head_idx=&se_dept_idx=&category=&head_idx_cateYN=&listCnt= (2025년 1월 3일 접속)
- “팩트체크: 한국 내 무슬림 이주자 인구는 얼마나 될까?” 김동문 「뉴스엔조이」 (2024.10.13.) <https://www.newsjoy.us/news/articleView.html?idxno=24948> (2025년 1월 3일 접속)
- 곽노필 기자, “세계 종교 지형이 바뀐다” 「한겨레」 (2019.10.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686134.html> (2025년 1월 3일 접속)
- “외국인에 악감정”… 처음 본 남녀 살해 시도 30대 징역 8년 (손현규, 2024.09.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2114400065> (2025년 1월 3일 접속)

2023년 12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lMkY1Nzg5NjglMkZhcj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IU3RyJTNEJTI2YmJzQ2xTZXEI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zJTJ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 (2025년 1월 3일 접속)

Pew Research Center, Origins and Destinations of the World's Migrants, 1990-2017, Feb.28, 2018. <https://www.pewresearch.org/global-migration-and-demography/feature/global-migrant-stocks-map/>(2024년 12월 29일 접속)

'Virginia Tech shooting leaves 32 dead' <https://www.history.com/this-day-in-history/massacre-at-virginia-tech-leaves-32-dead>,(2024년 12월 29일 접속)

김소연 기자,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한국', *매경economy* (2024. 08.30),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4&no=645944> (2025년 2월 10일 접속)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추적조사 목회자 보고서 3차": 102-103,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00 (2025년 1월 4일 접속)

논문투고일: 2025년 02월 28일

심사개시일: 2025년 03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04월 12일

• 국 문 초 록 •

2024년 4월 대한민국은 인구의 5%가 외국인인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노동인구가 줄고, 지방의 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의 둔화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민 현상은 이제 한국인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 이는 한국인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구조가 변화하면, 한국인들의 삶의 방향이 모호해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사명이 부가되었다. 한국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변동에도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윤리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것이 진보적 성향이던, 보수적 성향이던 윤리적 확고성은 한국기독교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이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한국교회가 신약성서의 인정 철학에 근거한 “이민자 환영”의 복음적 태도를 채택한다면, 이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적 윤리적 반향을 일으켜 서구 사회와 비교했을 때 진정한 “사회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 새로운 물결이 오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혼란의 폭풍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의 서핑보드(surfboard)로 한국 기독교의 혁신과 부흥으로 바뀔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주의, 글로벌리즘, 저출산과 고령화, 기독교윤리, 한국교회, 인정, 이주민
